지방행정연구 제40권 제2호(통권 145호) 2026. 6. 523~556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6.40.2.523

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rst-half Fiscal Spending Timing and Regional Economic Vitality

이 서 희**·유 보 람***·최 정 우****
Seohee Lee, Boram Yoo, Jungwoo Choi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Ⅳ. 실증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지방재정 지출의 '규모(scale)'를 넘어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기 대응 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상반기 신속집행 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2024년 전국 17개 시·도(기초 합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변량 고정효과(TWFE) 모형을 통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층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지역내총생산(GRDP), 민간 소비(신용카드 매출액), 생활경제 역동성(순창업 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GRDP 및 순창업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신속하게 투입된 재정이 연간 누적 생산 성과와 경제 주체의 진입 결정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측정한 민간 소비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재정 시점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6. 3. 6. 심사기간: 2026. 3. 6. ~ 2026. 4. 13. 게재확정일: 2026. 4. 13.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생산 활동 및 경제 구조 변화를 경로로 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이 단기 체감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 연간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중 경기 안정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향후 지방재정 성과 관리에서는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의 유형과 시간 구조를 고려한 다층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제어: 상반기 재정집행,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지출 시점(timing), 이변량 고정효과 모형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 timing—rather than mere scale—on regional economic vitality in South Korea.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first-half expedited execution policy, a counter-cyclical strateg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employ panel data from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ggregating underlying municipal data) covering 2016 to 2024. A Two-Way Fixed Effects (TWFE) model is applied to control for unobserved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ommon annual shocks. To capture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regional economic vitality, the study specifies three dependent variable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private consumption (credit card sales volume), and local economic dynamism (net number of new business establishments).

The findings reveal that first-half fiscal execution does not exert a uniform effect across all indicators. First-half expenditure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GRDP and net business startups, suggesting that the early injection of fiscal resources contributes to annual cumulative output and the entry decisions of economic agents. In contra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s found for private consumption as measured by credit card sales, implying that the impact of fiscal timing materializes gradually through production activities and structural economic change rather than through immediate consumption stimul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irst-half fiscal spending policy operates as an annual economic stabilization mechanism that underpins year-round economic performance, rather than functioning solely as a short-term demand stimulus. Accordingly,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local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away from uniform execution-rate benchmarks toward a multi-layered evaluation

framework that accounts for both the types of indicators through which policy effects emerge and the temporal structure of those effects.

□ Keywords: First-half Fiscal Spending, Expedited Execution, Regional Economic Vitality, Fiscal Timing, Two-Way Fixed Effects (TWFE) Model

Ⅰ. 서론

현대 재정정책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단순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적 조정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최은호·홍준현, 2020; 여차민·이석환, 2014; 박충훈 외, 2020).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의 마중물(pump-priming)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 침체 국면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최정우·신유호, 2018; 박명호·오종현, 2017).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재정 집행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서희 외, 2025). 즉, 정책적 관점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은 첫째,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의 하방 위험을 방어하고,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박윤정, 2024; 최은호·홍준현, 2020).

그러나 상반기 재정집행이 정책적 의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분분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정의 총량적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단순히 집행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Adriana & Grigorescu, 2011; 김성태·허석균, 2013; 정철현·김정한, 2008; 임응순, 2015 등).

문제는 정책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와 통계적 지표 간에 반복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재정의 신속(조기) 집행이 경기 부양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반면(김성태·허석균, 2013; 정철현·김정한, 2008; 임응순, 2015 등),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출 시점만 앞당길 뿐 실질적인 민간 소비나 투자 유발 효과는 미약하거나 일시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Perotti, 2004; Alesina & Ardagna, 2010). 더욱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상반기 재정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활성화 지표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충훈 외, 2020). 따라서 재정 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점(timing)'이 경제 주체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며, 이것이 실제 지역 내 생산, 소비, 창업 활동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한 정교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반기 재정집행의 '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인과적 관계 또는 함의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의 핵심 변수로 정부가 관리하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항목'만이 아니라, '상반기 전체 재정집행 규모'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지역경제 전체에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규모(scale)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신속집행 대상 사업만으로는 그 절대적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속집행 대상분은 지역별로 예산 구조에 따라 규모의 편차가 커서 객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은 예산을 빠르게 쓰는 제도(신속집행) 자체의 평가를 넘어,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으므로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 유형의 효과까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시·도(기초 합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 집행 시점이 지역내총생산(GRDP), 신용카드 매출액(소비), 순창업 수(골목상권) 등 다층적인 지역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재정 자금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유입될 때, 이것이 지역의 경제적 총량 성장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이러한 관계는 활성화 지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재정 투입의 효과가 거시 지표인 GRDP와 미시·체감 지표인 민간 소비 및 골목상권(순창업) 창출에 있어 동일한 방향성과 시차를 갖는지, 아니면 지표별로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관계의 차이는 정책 해석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획일적인 집행률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경제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정집행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정집행 시점과 재정정책의 작동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재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적 위치를 정리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가지는 평균 효과 중심 분석의 한계와 활성화 지표 간 반응 차이에 대한 설명 부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과 연구 설계를 제시한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구성과 변수 정의를 설명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패널 회귀 모형과 추정 전략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소비, 골목상권(순창업) 등 활성화 지표별 반응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재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해석한다. 그리고 활성화 지표별

반응 차이를 시간 구조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단순한 효과 유무 판단을 넘어 정책 효과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의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의 해석과 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정집행 시점과 재정정책의 작동 논리

1) 재정지출의 경기 대응 기능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총수요를 안정화시키고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거시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경기침체기 정부지출 확대는 민간부문의 수요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실질 GDP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케인즈 경제학은 이러한 적극적 재정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다(Keynes, 1936; Romer, 2012; Blanchard & Perotti, 2002). 재정지출의 효과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개념으로 정량화되며, 경기침체기에는 승수효과가 평균적으로 1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Batini et al., 2014; Fatas & Mihov, 2001),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투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강화하고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Leeper et al., 2010). 반면 경기회복 국면 이후 또는 수요가 포화된 상황에서의 지출 확대는 민간 활동을 대체하거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Leeper et al., 2010),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특성을 가진다(Auerbach & Gorodnichenko, 2012; Blanchard & Leigh, 2013).

〈표 1〉 재정지출의 '경기 대응 기능 및 재정승수'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발견	핵심 주장
이론적 토대	Keynes (1936)	케인즈 경제학 (General Theory)	불황기 유효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 정당성 부여	정부지출은 민간 수요 부족을 보완하여 경기를 부양함
정책 효과	Blanchard &	미국 분기별	세입 및 지출 충격이 GDP에	재정지출 확대는 실질

구분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발견	핵심 주장
정량화	Perotti (2002)	데이터 (SVAR 모형)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정책의 유효성 입증	GDP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전파 경로 및 유인	Leeper et al. (2010)	DSGE 모형 (동태적 일반균형)	재정지출이 민간 소비·투자에 미치는 유인 효과와 고용 유지 촉진 경로를 분석	지출은 고용을 촉진하나, 경제 여건에 따라 민간 활동을 대체할 위험도 존재함
승수 효과의 크기	Batini et al. (2014); Fatas & Mihov (2001)	국가별 재정승수 실증 분석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승수가 평균적으로 1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불황기 정부지출은 투입액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상태의존적 특성	Auerbach & Gorodnichenko (2012)	경기 국면별 비선형 모형	재정정책의 효과가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상태의존성'을 규명	재정정책은 경기 국면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작동함
예측 및 실증적 검증	Romer (2012); Blanchard & Leigh (2013)	재정 승수 추정치 및 거시 데이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긴축이나 확대가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경제 여건(Slack)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운용은 정책 성과를 왜곡할 수 있음

2) 지출 '규모'와 '시점'의 구분

재정지출의 정책 효과는 지출의 총량뿐 아니라 집행 시점(timing)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동일한 지출 규모라도 경기 하강기에 즉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파급효과가 크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지연되어 집행될 경우 효과성이 낮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존재한다(Cwik & Wieland, 2011; Auerbach & Gorodnichenko, 2012).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연구들은 재정승수가 경기 국면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며(Auerbach & Gorodnichenko, 2012; Ramey & Zubairy, 2018), 재정정책의 타이밍이 기대효과와 동태적 파급을 통해 정책 성과를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lanchard & Leigh, 2013). 다만 리카디안 등가정은 현재의 재정 확대가 미래 증세 기대를 통해 민간 소비를 제약함으로써 총수요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중립적 관점을 제시한다(Barro, 1990; Seater, 1993; Ricardo, 1820). 현실에서는 신용제약과 경제주체의 이질성으로 인해 이러한 등가정이 완전하게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병존하므로(Perotti, 2004; Alesina & Ardagna, 2010), 집행 시점 효과는 경제 여건과 제도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 재정 집행 '시점' 효과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발견	핵심 주장
집행 시점의 중요성	Cwik & Wieland (2011)	유로존 재정정책 시뮬레이션	재정지출이 지연되어 집행될 경우, 사전 예고 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지출 규모보다 즉각적인 집행 타이밍이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함
경기 국면별 비선형성	Auerbach & Gorodnichenko (2012)	미국 및 OECD 국가 분기 데이터	불황기(Recession)의 재정승수가 호황기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증명	경기 하강기에 집중된 재정 투입은 비선형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짐
승수 효과의 동태적 분석	Ramey & Zubairy (2018)	미국 장기 역사적 데이터 (State-dependent)	경기 상태뿐 아니라 유동성 제약 및 금리 하한(ZLB) 상황에서의 재정승수 차이를 분석	재정지출의 효과는 경제 여건(Slack)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함
전망 및 기대 효과	Blanchard & Leigh (2013)	IMF 긴축 전망 및 실제 성장률	재정 긴축의 시점과 강도가 경제 주체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수 과소추정 문제를 지적	정책의 타이밍과 소통이 기대 경로를 통해 실질 성과를 좌우함
재정 중립성 (전통적)	Barro (1990); Seater (1993)	리카디안 등가정 (Ricardian Equivalence)	합리적 경제주체는 미래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여 현재 소비를 줄임으로써 재정 확대 효과를 상쇄함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중립적일 수 있음
현실적 제약 및 비판	Perotti (2004); Alesina & Ardagna (2010)	구조적 VAR 및 부채 감축 사례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s)과 가계의 이질성으로 인해 리카디안 등가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움을 지적	제도적 조건과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집행 시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함

3) 신속 집행의 기대효과 및 지역별 이질성

뉴케인지안 모형은 가격·임금 경직성 및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Christiano, Eichenbaum, & Rebelo, 2011), 경기침체 초기의 조기 투입이 기대효과와 결합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와 연결된다(Auerbach & Gorodnichenko, 2012; Ramey & Zubairy, 2018). 또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은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가계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소비 유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Kaplan, Moll, & Violante, 2018).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 하방 국면에서 재정 투입의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에 경

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의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자금을 민간에 조기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하여 경제하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인한다(서은숙 외, 2012).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도 경제성장과 신속집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신속집행은 상반기의 정부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상반기의 지출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말까지 지출하지 못한 불용 또는 이월액을 절감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연중 지출 총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비 지출액은 연중 규모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상반기에 집행할 경우, 시공사에 자금이 전달되고, 이후 하청업체에 자금이 전달되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어 연중 정부지출의 증가 외에도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시공사에 자금이 교부되나 공정률을 높여 사업비가 연중 하청업체 등에 전달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실제 박명호·오종현(2017), 최정우·신유호(2018) 장혜윤 외(2019) 등에서 신속집행으로 인해 불용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를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지출 유형에 따라 집행 시차와 파급 경로가 상이하다는 점도 신속집행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자본지출은 집행 지연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소득·소비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Auerbach & Gorodnichenko, 2015), 신속집행이 어떤 지출 구조로 구현되는가에 따라 단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관측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Batini & Weber, 2014; Karabarbounis, 2022). 따라서 상반기 재정집행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지출의 '규모'뿐 아니라 '시점'과 더불어 지출 구조 및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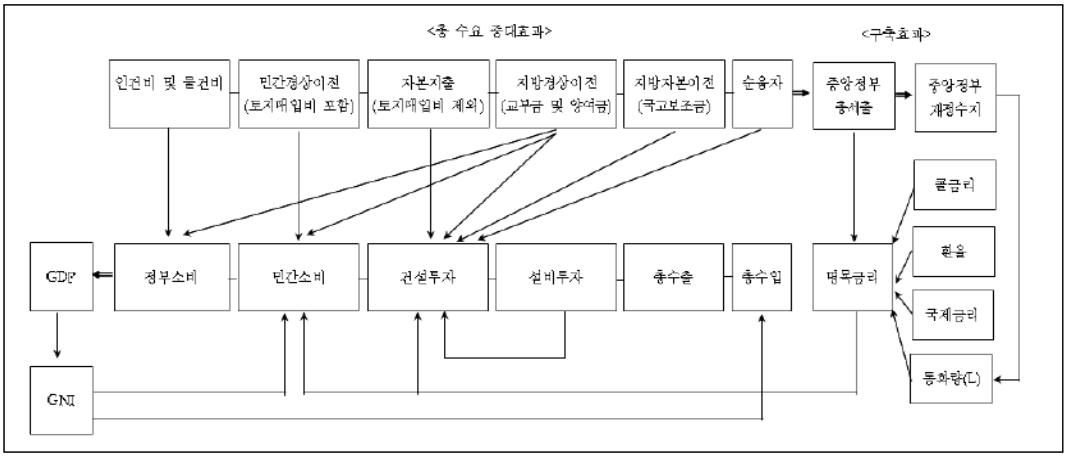
〈표 3〉 신속 집행의 '이론적 기대 및 지출 구조'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발견	핵심 주장
정책 효과 증폭 조건	Christiano et al. (2011)	뉴케인지안(New Keynesian) 모형	가격·임금 경직성 및 제로금리하한(ZLB)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극대화됨을 증명	경기 하방 국면의 조기 재정 투입은 정책 효과를 증폭시킴
조기 투입의	Auerbach & Gorodnichenko	경기 국면별 상태의존 모형	경기침체 초기 단계의 지출이 경제주체의 기대	집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기대 효과를 통해

구분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주요 내용 및 발견	핵심 주장
파급력	(2012); Ramey & Zubairy (2018)		형성과 결합하여 더 강력한 동태적 파급력을 가짐을 분석	정책 성과를 높임
미시적 전달 경로	Kaplan et al. (2018)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 (HANK)	유동성 제약 가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지출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짐을 제시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신속한 지출은 즉각적인 소비 유발 효과를 가짐
지출 유형별 시차	Auerbach & Gorodnichenko (2015)	지출 항목별 승수 효과 분석	자본지출(SOC 등)은 집행 지연이 잦으나,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 및 소비로의 연결이 빠름을 발견	신속집행의 성과는 지출 구조(이전지출 vs 자본지출)에 따라 상이함
지역경제 활성화	Batini & Weber (2014); Karabarbounis (2022)	지역 거시경제 데이터 및 고용 지표	지출 구조와 집행 시점의 결합이 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신속집행 효과는 지출의 시점과 경제 여건의 정합성에 의해 결정됨

이와 관련하여 박명호·오종현(2017)은 정부지출의 특성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출 증대는 인건비 및 물건비와 같은 정부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경상이전은 민간소비, 그리고 자본지출은 건설투자, 시·도의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금은 건설투자 및 소비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정부 지출 항목별 재정지출의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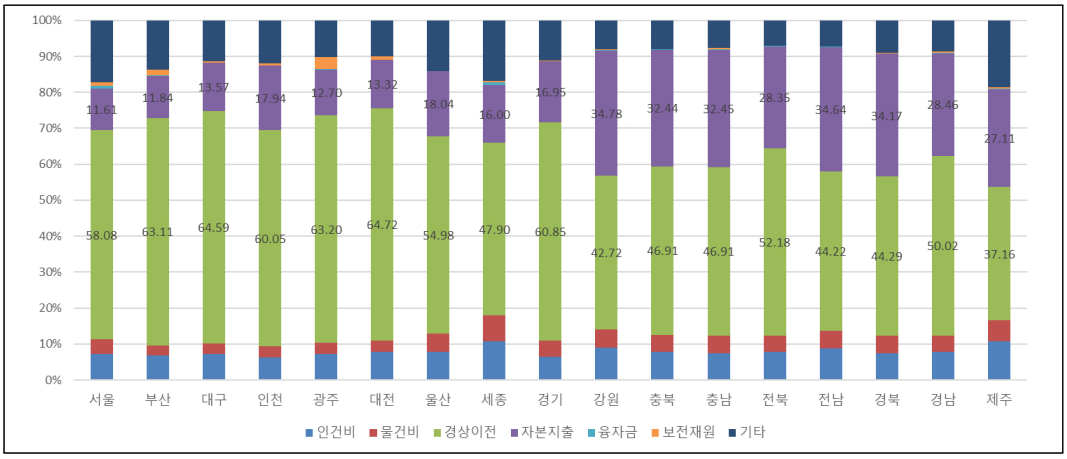
출처: 박명호·오종현(2017: 28)

다만 지출유형에 따라 지출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상이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자금 규모도 달라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구조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자금 교부 절차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상반기 집행을 제약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이 교부되더라도 자금 교부 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1차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예산에 반영된 이후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상반기 지출의 제약 요인이 된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 SOC 공사 등과 관련되는 시설비, 계약절차가 소요되는 사업비 등은 사업 추진의 사전절차가 많으므로 해당사업이 세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상반기 집행을 제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혜인(2020)이 중앙정부의 분야별 사업의 월별 계획대비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비나 건설보상비 비중이 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상반기 집행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정우(2022)가 신속집행 상위 25% 지역과 하위 25% 지역의 지출특성 차이를 평균비교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5% 지역은 하위 25%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본지출, 연구개발비, 포상금, 출연금 등이 적고 자치단체등 이전, 출자금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5년 예산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출특성별 예산 구분을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어려운 자본지출은 비교적 도시지역인 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 지역 내에서도 최저 16.95%(경기)에서 최대 34.64%(전남)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신속집행이 같은 규모로 추진되더라도 지역별 세입 및 세출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규모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지역별 지출특성별 예산 구성 비교(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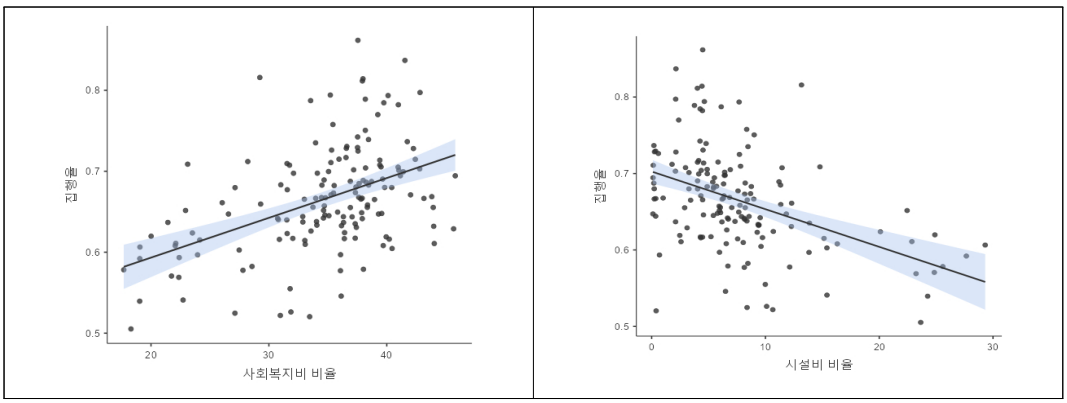
(단위: %)



주1: 2025년 최종예산 총계 기준, 시도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
주2: 기타는 내부거래 및 예비비및기타의 합산액
출처: 지방재정365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경상지출 항목인 사회복지비 그리고 대표적인 자본지출 항목인 시설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신속집행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상지출은 자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 절차가 간소하므로 집행수준과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비는 집행수준과 부(-)의 관계를 보여 시설비가 많은 자치단체는 오히려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지출특성과 신속집행과의 관계



주: 2016~2024년 시·도별 결산 기준
출처: 지방재정365

2. 재정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존 연구

1) 재정지출과 경제 성장: 총량 효과 중심의 연구 축적

재정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출의 총량적 확대가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관점에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의 정부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논리는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 왔다(Keynes, 1936; Blanchard & Perotti, 2002; Romer, 2012).

특히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에 관한 연구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산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 집중해 왔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승수가 1을 상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유휴 생산능력과 민간수요 위축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Fatas & Mihov, 2001; Baunsgaard et al., 2014; Auerbach & Gorodnichenko, 2012). 반면 경기 확장기에는 자원 제약, 구축 효과(crowding-out),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된다(Barro, 1990; Cwik & Wieland, 2011).

국내 연구 역시 이러한 총량 중심 접근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김성태·허석균(2013), 정철현·김정한(2008), 임응순(2015) 등은 재정지출 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주로 연간 재정 규모나 지출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언제 집행되었는가'라는 시점(timing)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재정지출의 총량적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지출의 시점이나 집행 구조가 성장 효과를 어떻게 달리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정: GRDP·소비·골목상권 지표의 활용과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는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방법론적 쟁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경제를 주로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 소비, 지방세수, 상권 지표 등 다양한 변수로 포착해 왔다(이창근, 2019; 김소연·류수열, 20222; 이서희 외, 2024; 이서희 외, 2023).

GRDP는 지역 단위의 경제 규모와 총량적 성장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방재

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이창근, 2019; 김소연·류수열, 2022). 재정지출이 공공투자 확대, 산업 기반 강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GRDP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 성장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GRDP는 기업 본사 입지, 중앙정부 투자, 광역 단위 산업 구조의 영향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이나 단기적 경기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민간 소비와 상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 흐름을 고빈도로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정책의 단기적 파급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Lee et al., 2021; 이서희 외, 2024). 특히 소비는 재정지출의 직접적 파급 경로 중 하나로, 이전지출이나 공공고용 확대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골목상권과 창업 활동의 역동성이 강조된다. 순창업 수나 사업체 증감 지표는 재정 투입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경제 주체의 형성과 민간 부문의 자생적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여차민, 2013; 이우진 외, 2019; 이서희 외, 2023). 이러한 지표는 대기업 중심의 생산 지표나 총량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경제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일 지표로 포착되기보다는, 총량적 성장(GRDP), 민간 소비 활력, 골목상권·창업 활동 등 서로 다른 차원의 지표를 통해 다층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3) 기존 연구 결과 요약: 재정지출 효과의 조건부성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관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분석 대상 지표와 경제 여건,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조건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지출은 GRDP와 같은 거시적 총량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민간 소비나 상권 활성화와 같은 미시적·체감 지표에서는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Perotti, 2004; Alesina & Ardagna, 2010). 이는 재정지출이 생산 구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반영되는 경로와, 소비·상거래를 통해 단기적으로 반영되는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는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집행 시점과 집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는 연간 단위의 재정 변수에 의존하여 이러한 시간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Ramey & Zubairy, 2018). 특히 상반기 집중 집행과 같

은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지역경제의 단기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제한적이다.

셋째, 지역경제는 개방성과 이동성이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동일한 재정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산업 구조, 인구 특성, 재정 자율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Peterson, 1981; Vanhove, 2018).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통제하거나 해석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재정지출의 평균적 효과를 중심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으나, 재정 집행의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지표별·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이 지역경제의 다양한 활성화 지표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재정지출 및 재정집행 관련 연구는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나,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다.

첫째, 평균 효과 중심 분석의 한계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재정지출의 효과를 연간 단위 또는 장기 평균 효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이질성이나 비대칭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Blanchard & Perotti, 2002; Auerbach & Gorodnichenko, 2012). 이러한 접근은 재정지출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경우 나타나는 단기적 반응이나, 지표별 상이한 조정 과정을 평균값에 의해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반기 재정집행과 같이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갖는 정책의 경우, 연간 평균 효과만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간 반응 차이에 대한 설명 부족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GRDP나 고용과 같은 거시적 총량 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평가해 왔으며, 소비나 골목상권과 같은 미시적·체감 지표와의 반응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는 제한적이었다(Perotti, 2004; Alesina & Ardagna, 2010). 그러나 재정지출은 지출 유형과 전달 경로에 따라 생산, 소비, 창업 활동에 서로 다른 속도와 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 간 이질성이 충분히 이론화되거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셋째, 정책 효과의 시간 구조(time structure)에 대한 고려 부족이다. 재정정책은 인식 시차, 결정 시차, 집행 시차, 경제 반응 시차 등 복합적인 시간 구조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연구는 이러한 시차를 명시적으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Ramey & Zubairy, 2018). 특히 재정집행의 '시점'이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이나 단기 경기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논의가 축적되지 않았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재정집행의 평균적 효과에 주목해 왔으나,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 관계가 지니는 지표별 차이, 시간적 구조, 정책 전달 경로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여, 재정집행의 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단면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1. 분석 틀

본 연구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간의 관계를 기본 분석 틀로 설정한다. 기존 연구가 재정지출의 총량 또는 연간 평균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동일한 재정 규모 하에서도 재정이 언제 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기본 분석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독립변수)이 지역경제 활성화(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되, 그 효과는 활성화 지표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재정집행의 조기화는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나 골목상권과 같은 체감 지표에 보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지역내총생산(GRDP)과 같은 총량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거나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이창근, 2019; 오병기·김대영, 2005; 박완규, 2013; 이형석·이준상, 2022).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단일 개념으로 환원하지 않고, ① 거시적 총량 지표(GRDP), ② 민간 소비 지표(신용카드 사용액), ③ 골목상권·생활경제 지표(순창업 수)라는 다층적 지표 체계로 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반기 재정집행이라는 동일한 정책 충격이 지역경제의 각기 다른 단면에 어떠한 차별적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석 설계이다.

〈그림 4〉 지역경제 활성화 다층적 지표 체계 분석 틀



주: 본 연구의 측정 변수 선정은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지역경제 성과지표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현실(중앙집권성, 짧은 사업 주기)을 반영하여 설계됨. 특히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확장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함

2. 데이터 및 변수 정의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합산 기준)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정집행 자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재정 관련 공공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지표는 통계청, 카드 매출 통계, 사업체·창업 관련 행정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패널 자료 구성은 지역 간 이질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 구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종속변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 가지로 구성된다. ①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경제의 총량적 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시 지표로 활용한다. ②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역 내 민간 소비 및 상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고빈도 소비 지표로, 단기 경기 반응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대리변수로 설정한다. ③ 순창업 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창업과 폐업을 고려한 순증 사업체 수로, 골목상권 및 생활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연간 전체 재정집행 대비 상반기 집행 비율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이는 특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상반기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제로 투입되는 시점 효과를 포괄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설계

이다.

셋째, 통제변수로는 지역경제 여건과 재정 규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구 규모, 재정 규모, 산업 구조 등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 효과가 단순한 규모 효과나 구조적 차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표 4〉 분석 데이터 주요 변수 정의

종속변수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변수명	정의	자료 출처	단위
GRDP	시도별 전체 지역내총생산	KOSIS	log
신용카드 사용액	시도별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ECOS	log
순창업 수	인허가 수(폐업 제외)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건
독립변수 (집행률)			
상반기 집행액	기간 내(1~6개월) 집행액	지방재정365	log
통제변수			
예산 규모	전년도 세출결산액	지방재정 365	log
자본지출비중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최종 예산)	지방재정 365	%
경상지출비중	총지출 대비 경상지출(최종 예산)	지방재정 365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지방재정 365	%
인구	전년도 총인구수	e-나라지표	log
지방 정치	3선 연임 제한	국가선거정보개방포털시스템	더미
상권 규모	전년도 누적 인허가 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log
조절변수			
지역 유형1	수도권/비수도권		더미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변량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TWFE) 모형을 활용한다. TWFE 모형은 패널 자료에서 관측되지 않는 단위별 고유 특성과 시점별 공통 충격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정책 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Imai & Kim, 2020).

구체적으로 TWFE 모형은 지역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미관측 특성(예: 지리적 조건, 산업 기반, 제도적 환경 등)을 지역 고정효과로 통제하고, 경기 순환이나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같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도 고정효과로 제거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다른 교란 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다(Verdier, 2020; Chaisemartin & d'Haultfoeuille, 2020).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TWFE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i,t} = \alpha_i + \delta_t + \beta \cdot Timing_{i,t} + \gamma X_{i,t} + \epsilon_{i,t}$$

여기서 $Y_{i,t}$ 는 지역 i의 시점 t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GRDP, 신용 카드 사용액, 순창업 수)를 의미하며, $Timing_{i,t}$은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나타낸다. α_i는 지역 고정효과, δ_t 는 연도 고정효과, $X_{i,t}$는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TWFE 모형은 다기간 패널에서 가능한 모든 기간 간 격차를 통합하는 차분 회귀(first-difference)와 수치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Ishimaru, 2021), 정책 효과 분석에서 구조적 편의를 줄이는 데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지역 간 이질성과 연도별 경기 변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TWFE 모형은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적절한 분석 틀로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 효과가 활성화 지표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일한 TWFE 모형을 종속변수별로 반복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재정집행 시점이 소비, 골목상권, GRDP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정책 효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다.

Ⅳ. 실증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기초분석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계량 분석에 앞서,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의 분포 및 기초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기간(2016-2024) 중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행률은 전국 평균 약 47~51%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2016년과 20222년 집행률 수준은 비슷하나 실제 상반기 집행액은 90.1조원이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집행 규모를 고려할 경우 연도별 정부지출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세부 지자체별·연도별 집행 비중은 CV값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2020

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반기 집행 비중이 51.1%까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상반기 집행규모가 46.5조원이나 증가하였으며, 해당 연도의 CV값은 0.855로 다른 분석기간의 추세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시점(timing)' 전략이 시기별로 상이하게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과 함께 본예산의 편성액을 최대치로 증대시켰고, 지출 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계약 관련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적극적 선금 지급 및 선금 규모 확대, 대규모 사업 추진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특히 2020년은 3월 및 4월에 연례없는 상반기 추경을 2회나 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상적 지출의 비중이 높아 지출특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 간 규모 차이로 인해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순창업 수는 외부 충격에 보다 민감한 가변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재정집행의 시점 변화가 총량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경제 주체의 활동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전국 상반기 집행률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평균(%)	47.8	47.6	47.2	48.2	51.1	47.4	47.5	49.6	50.9
집행규모	119.5	129.4	135.5	156.8	203.3	194.8	209.6	212.7	224.5
CV	0.734	0.775	0.773	0.777	0.855	0.807	0.793	0.764	0.780

주: 상빈기 집행률은 예산현액 기준
출처: 지방재정 365 일별 데이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GRDP, 신용카드 사용액, 순창업 수 모두 지역 간 규모 차이와 변동성이 뚜렷하게 관찰된다(표 6~8 참조). GRDP는 지역경제의 총량적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분산이 큰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순창업 수는 경기 변동과 정책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도별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단기 경기 흐름을 포착하는 데 적합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기술통계(1)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순창업 수(건)	153	12,190	17,160	912	89,481
상반기 집행액(십억원)	153	10,367	8,484	545	44,567
상권 규모_t-1(건)	153	235,798	256,760	10,477	1,210,029
인구_t-1(명)[1]	153	3,038,642	3,245,194	210,884	13,630,821
세출결산_t-1(십억원)	153	15,411	13,462	1,493	62,795
재정자립도(%)	153	39.60	15.16	15.48	81.31
경상지출 비율(%)	153	64.42	7.47	45.68	77.96
자본지출 비율(%)	153	24.87	8.89	11.61	40.48
연속당선3회여부(더미)	153	0.04	0.19	0.00	1.00

〈표 7〉 기술통계(2)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신용카드 사용액(십억원)	112	33,368	66,191	4,833	352,922
상반기 집행액(십억원)	112	10,215	7,887	2,030	43,144
상권 규모_t-1(건)	112	234,970	237,935	47,327	1,055,445
인구_t-1(명)	112	3,214,566	3,259,093	624,395	13,565,450
세출결산_t-1(십억원)	112	14,758	12,275	3,223	61,083
재정자립도(%)	112	38.69	15.60	15.48	81.31
경상지출 비율(%)	112	64.17	7.39	48.52	77.14
자본지출 비율(%)	112	25.18	9.02	11.78	40.48
연속당선3회여부(더미)	112	0.05	0.23	0.00	1.00

〈표 8〉 기술통계(3)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GRDP(십억원)	136	122,426	141,137	11,728	578,124
상반기 집행액(십억원)	136	10,012	8,204	545	43,144
상권 규모_t-1(건)	136	228,991	246,659	10,477	1,133,387
인구_t-1(명)	136	3,041,080	3,240,463	210,884	13,589,432
세출결산_t-1(십억원)	136	14,794	12,963	1,493	62,245
재정자립도(%)	136	39.77	15.40	15.48	81.31
경상지출 비율(%)	136	64.04	7.45	45.68	77.14
자본지출 비율(%)	136	25.16	8.86	11.78	40.48
연속당선3회여부(더미)	136	0.04	0.21	0.00	1.00

주: 한국은행 개인 신용카드 통계의 지역단위 불일치(세종-충남 통합), 기타 지역 처리, 법인·개인 혼재 등의 한계가 있음.

1) 상권 규모나 인구수 같은 구조적 지표는 정책 집행이나 경제활동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후행 변수라서 동일 연도 값을 사용하면 정책 변수(예산 집행)와 동시 상관이 생겨 인과 추론이 어려워지므로, 전년 값을 이용함. 이 경우 "사전 결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상관과 내생성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다른 전년도 값을 이용하는 변수도 동일한 이유임.

2.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본 절에서는 이변량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TWFE) 모형을 활용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은 2016–2024년 기간 동안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모든 모형에는 지역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포함하여 지역별 불변 특성과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 집행의 상반기 집행 비중의 확대는 지역경제의 총량적 생산과 구조적 역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내총생산(GRDP) 모델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의 시점 효과는 0.291로 1% 유의수준에서 매우 강력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예산의 전체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이 지역의 연간 총생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박명호·오종현(2017), 최은호·홍준현(2020) 등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집행 제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며, 상반기의 강화된 집행관리는 하반기의 불용액 감소를 유발하는 하반기 누적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명호·오종현, 2017). 따라서 상반기의 집행 강화가 정부 지출의 증가와 연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순창업 수 분석에서도 상반기 집행 시점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상반기 집행 비중 또한 순창업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 조기 투입의 효과가 일정 기간의 시차(lag)를 두고 민간의 창업 의사결정에 전이되는 '시간적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창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소득, 혁신, 그리고 지역·산업·기업요인 등의 영향을 받으며(이창근, 2017)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산업의 특성 및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지원사업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를 고려하면 신속집행을 통해 연내 창업지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반기 집행액 외에도 전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순창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반기의 집행 제고가 상고하저의 지역경제 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액(소비)의 경우, 집행 비중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졌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 지표가 재정 외에도 물가, 금리 등 민감한 거시 변수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이며, 특히 데이터의 지리적 불일치(세종–충남 통합 등)와 같은 측정상의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지출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이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 제고에 부응한 노동수요 증가 그리고 임

금상승과 기계의 노동공급 증가 효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경로를 통해 유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소비의 증대는 소득계층 및 연령별로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김원기, 2020).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중 저소득층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 등 가계이전소득은 상반기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월마다 균등하게 지급되고, 실제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강화를 위한 신속집행 대상액에서도 제외되므로 지역경제, 특히 민간소비 진작에 있어서의 상반기 집행강화 노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상반기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에 미치는 영향(TWFE)

변수	GRDP	신용카드 사용액	순창업 수
상반기 집행액(log)	+0.291*** (0.076)	+0.141 (0.165)	+43,091** (20,926)
전년도 상반기 집행액(log)	+0.013 (0.012)	+0.062 (0.025)	+4,405** (1,885)
전년도 상권규모(log)	+0.259 (0.207)	+0.462 (1.116)	+50,493 (35,341)
전년도 인구(log)	+0.192 (0.163)	-0.403 (2.045)	-38,390 (34,813)
전년도 세출결산(log)	+0.021 (0.052)	+0.017 (0.104)	+3,847 (6,416)
재정자립도	+0.002 (0.002)	+0.009 (0.004)	+84 (149)
경상지출 비중	+0.001 (0.002)	-0.002 (0.004)	+430 (260)
자본지출 비중	+0.003 (0.002)	-0.009 (0.006)	-377 (426)
3선 연임 제한	+0.032*** (0.005)	+0.003 (0.024)	-1,358 (1,596)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관측치수	136	112	153
R^2	0.561	0.301	0.309
F-statistic (p)	1,769.674 (0.000)	1351.500 (0.000)	118.526 (0.000)
Hausman x^2 (p)	20.508 (0.015)	40.215 (0.000)	32.557 (0.000)
시점 FE (p)	3.414 (0.002)	1.195 (0.315)[2]	7.123 (0.000)
개체 FE (p)	274.182 (0.000)	22.829 (0.000)	24.387 (0.000)

주: *** p<0.01, ** p<0.05, * p<0.1. 2) Hausman 검정 결과 귀무가설(RE 적합)을 기각하여 고정효과(FE) 모형을 채택함.

2) 일부 모형에서 시간 고정효과(Time FE)의 F-검정이 비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시간 충격이 작았다는 의미일 뿐 시간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음. 재정 집행 시점은 연도별 제도 운영, 경기 변동, 중앙정부 정책 사이클 등 공통적 시간 충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간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TWFE 사양이 정책효과 분석의 표준이며 모형 안정성도 가장 높게 유지됨. 따라서 본 연구는 Time FE의 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TWFE 모형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함.

3. 분석 결과의 종합: 시간 구조 관점에서의 해석 및 정책 효과 해석의 유의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전반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지표별 시간 구조(time structure)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측됨을 보여준다. 특히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GRDP와 순창업 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민간 소비 지표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를 단순한 "단기 경기부양 효과"로 해석하는 기존 인식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은 단기 소비 진작이나 체감 경기 회복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수반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반응보다는 연 단위로 누적되는 경제 성과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GRDP는 연간 단위로 집계되는 총량 지표로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재정이 연중 생산 활동, 부가가치 창출, 투자 집행 등의 과정을 거쳐 누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이 GRDP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는,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가 단기적 충격보다는 연간 생산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순창업 수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재정집행 시점이 단순한 기존 경제활동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주체의 진입이라는 의사결정 중심의 결과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액이 순창업 수에 대해 함께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재정집행의 시점 효과가 일정한 시간 지연(lag)을 거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고빈도·단기 변동성이 큰 지표로서, 재정집행 시점 외에도 물가, 소득, 이전지출, 민간 소비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상반기 재정집행 비중과 같은 연 단위 정책 변수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식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가 '즉각적 소비 → 단기 경기 반응'이라는 단선적 경로보다는, '연중 생산·구조적 조정 → 누적 성과'라는 시간 구조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의 효과를 "있다/없다"로 이분화하여 평가하는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동일한 재정집행 시점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 효과를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단기 소비 지표에 한정하여 판단할 경우, 상반기 재정집행의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GRDP나 순창업 수와 같이 연간 누적 성과 또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정책 효과의 부재라기보다는, 정책 효과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 범위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은 단기 소비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연중 생산 활동과 지역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성격의 경기 대응 수단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재정집행 정책의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집행률 중심 평가 체계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소비 반응을 과도하게 기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이전에 "효과 없음"으로 판단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반대로, 연간 생산 지표나 구조적 활성화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경우, 재정집행 시점 정책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을 단기 경기부양 수단으로만 해석하는 관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간 구조와 지표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해석 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이후 결론 장에서 논의될 정책적 함의의 핵심 출발점이 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6~2024년 17개 시·도(기초 합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변량 고정효과(TWFE)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가 재정지출의 총량 효과나 집행률 달성 여부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본 연구는 재정이 언제 집행되는가(timing)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 전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순창업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재정집행 시점이 연간 누적 생산 성과와 지역 내 경제 주체의 진입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측정한 민간 소비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반응으로만 나타나기보다는, 연중 생산 활동과 경제 구조 변화라는 경로를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는 단기·고빈도 지표보다는 연 단위로 집계되는 총량 지표와 구조적 활성화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된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반기 재정집행의 효과를 단일 지표, 특히 단기 소비 지표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일한 재정집행 시점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의 성격에 따라 관측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이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연중 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성격의 경기 대응 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반기 재정집행은 즉각적인 체감 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연간 단위의 경제 성과와 구조적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현행 집행률 중심의 재정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집행률 자체는 재정 운용의 속도와 이행도를 보여주는 관리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곧바로 정책 효과의 대리 변수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책 효과가 지표별·시간 구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는 정책의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의 평가는 집행률 달성 여부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의 유형과 시간 범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TWFE 모형을 중심으로 평균적 관계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이질성이나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경제 및 정부지출의 규모, 그리고 산업특성 등이 상이하여 별도로 분석할 경우 지역의 이질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3개 지역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후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이나 시점 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집행 효과의 보다 미세한 시차 구조를 정밀하게 포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는 재정집행 시점과 경제 반응 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정집행 시점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 산업 구조 변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보다 확장된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재정집행 시점 정책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을 단순한 집행 속도의 문제를 넘어, 정책 타이밍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성과 평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허석균. (2013).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5(2): 71-105.

김소연·류수열. (2022).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영향 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20(2): 5-25.

김원기. (2020).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별, 연령별 이질성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9(1): 1-27.

박명호. 오종현. (2017).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활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완규. (201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내 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75-91.

박윤정. (2024). 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신속집행 관행은 지양되고 정확한 경기진단 선행 필요. 「이슈와 논점」.

박충훈 외. (2020). 「경기도 신속집행제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서은숙·백응기·임지은. (2012).「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인. (2020).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여차민. (2013). 지역특구제도의 선별적 규제완화 효과 분석. 「지역연구」, 29(3): 133-158.

여차민·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신속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오병기·김대영, (2005),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53-84.

이서희·신두섭·유보람·최정우·오유리. (2024). 「지역경제 진단지표 설계와 검증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연구과제.

이서희·유보람·최정우. (2025).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

이서희·전성만·유보람·전영준. (2023).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연구과제.

이우진·김도현·김종성·오혜미·김가영. (2019).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 지표 개발 및 지역 창업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의 성과지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이창근. (2017). 산업별 창업 결정요인의 세 가지 가설 검증, 2008-2014년. 「지역연구」, 33(1): 17-27.

이창근. (2019),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한국지방재정논

집」, 24(3): 51-72.
이형석·이준상. (2022).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한국경제연구」, 59-96.
임응순. (2015).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연구.「재정정책논집」, 17(2): 155-170.
장혜윤·장현경·박충훈. (2019). 사업특성에 따른 신속집행제도의 운영효과 분석: 불용률을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33(3): 111-138..
정철현·김정한. (2008). 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Barro 모형을 중심으로.「정부학연구」, 49-72.
최은호·홍준현. (2020).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57-83.
최정우·신유호.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 23(3): 53-73.
최정우. (2022).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 19(1): 1-22.
Adriana, G., & Grigorescu, A. (2011). *Application Prospects Of The Paretto Model In The Execution Of The Local Budgets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Regional Gdp (No. 3190)*. EcoMod.
Alesina, A., & Ardagna, S. (2010).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taxes versus spending. *Tax policy and the economy,* 24(1): 35-68.
Alesina, A., & Ardagna, S. (2010).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Taxes versus spending. *Tax Policy and the Economy,* 24(1): 35–68.
Auerbach, A. J., & Gorodnichenko, Y. (2012). Fiscal multipliers in recession and expansion. In A. Alesina & F. Giavazzi (Eds.), Fisc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3–98.
Auerbach, A. J., & Gorodnichenko, Y. (2012).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2): 1-27.
Auerbach, A. J., & Gorodnichenko, Y. (2015). Effects of fiscal shocks in a globalized world. *NBER Working Paper,* 21100: 1–52.
Barro, R. 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S103–S125.
Batini, N., Eyraud, L., & Weber, A. (2014). *A simple method to compute fiscal multiplie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tini, N., Eyraud, L., & Weber, A. (2014). *Fiscal multipliers: Size, determinants, and use in macroeconomic projections. IMF Technical Notes and Manual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lanchard, O., & Leigh, D. (2013). Growth forecast errors and fiscal multiplier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117-120.

Blanchard, O., & Perotti, R. (2002).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4): 1329-1368.

Chaisemartin, C., & D'Haultfœuille, X. (2020). Two-way fixed effects estimators with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9): 2964-2996.

Christiano, L., Eichenbaum, M., & Rebelo, S. (2011). When is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lar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9(1): 78-121.

Cwik, T., & Wieland, V. (2011). Keynesian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and spillovers in the euro area. *Economic Policy,* 26(67): 493-549.

Fatas, A., & Mihov, I. (2000).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S-INSEAD R AND D.

Imai, K., & Kim, I. S. (2021). On the use of two-way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for causal inference with panel data. *Political Analysis,* 29(3): 405-415.

Kaplan, G., Moll, B., & Violante, G. L. (2018). Monetary policy according to HANK. *American Economic Review,* 108(3): 697-743.

Karabarbounis, M. (2022). *Does infrastructure spending boost the economy?* Economic Brief 22-04.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Keynes, J. 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Lee et al. (2021). The impact of COVID-19 regional cash subsidies on the sales of local businesses in South Kore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43(2): 103-136.

Leeper, E. M., Walker, T. B., & Yang, S. C. S. (2010). Government investment and fiscal stimulu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7(8): 1000-1012.

Perotti, R. (2004).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Banca d'Italia, Temi di Discussione,* 276: 1-44. (Working paper 버전)

Perotti, R. (2005).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Available at SSRN 717561.

Peterson, P. E.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mey, V. A., & Zubairy, S. (2018).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in good times and in bad: evidence from US historical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2): 850-901.

Ricardo, D. (1820). *Essay on the funding system. I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4: Pamphlets and Papers 1815-18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3-235.

Romer, C. D. (2012). *What do we know about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eparating evidence from ideology.*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omer, Paul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2-37.

Seater, J. J. (1993).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1): 142-190.

Vanhove, N. (2018).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2nd ed.).* London: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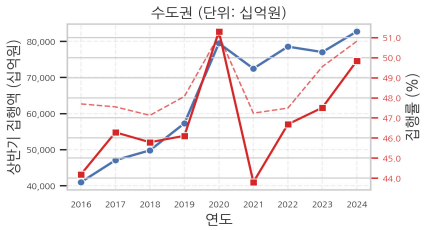
Verdier, V. (2020). Estimation and inference for linear models with two-way fixed effects and sparsely matched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2(1): 1-16.

이 서 희: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2020)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경제특구, 지역경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5극 3특 추진을 위한 정책 통합 방안 연구(2026)", "지역경제 활성화 측정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5)", "규제정책의 분권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2025)",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방안 연구(2024)" 등이 있다(seotae10@krli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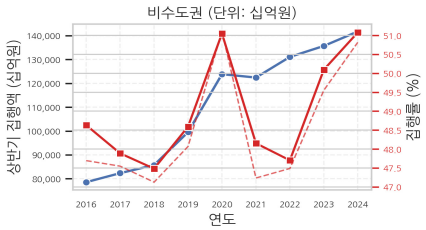
유 보 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정부 간 재원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2022)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정부간관계, 지역 발전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 담당 공무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2025)", "재정 투명성과 정부 간 자원배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분을 중심으로(2024)", "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 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2020)" 등이 있다(boram3884@krila.re.kr).

최 정 우: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 분석, 2019)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성과관리, 정책평가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공유재산관리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2025)",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시·도비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델파이조사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2024)" 등이 있다(jungwoo1088@kril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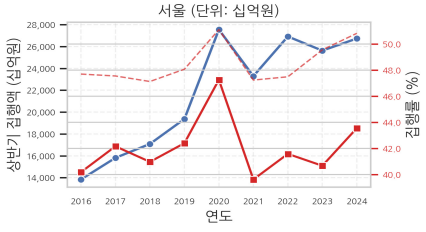
부록. 지역별 상반기 집행률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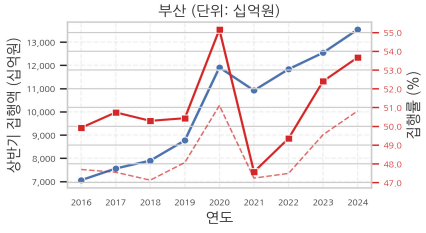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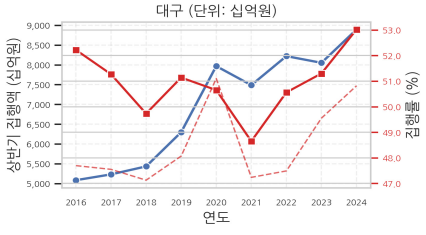
비수도권 상반기 집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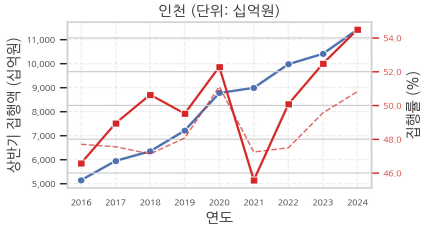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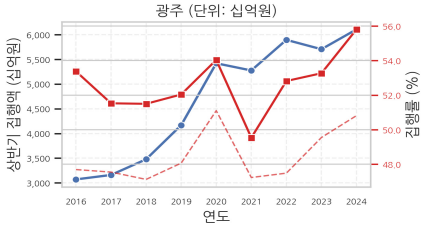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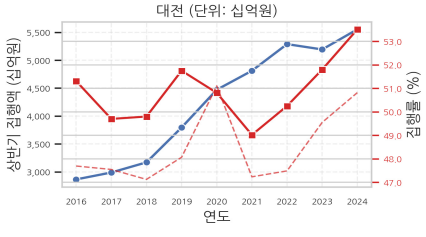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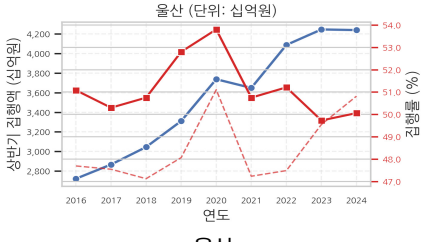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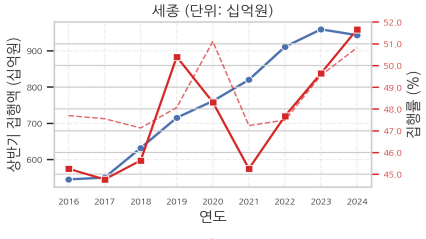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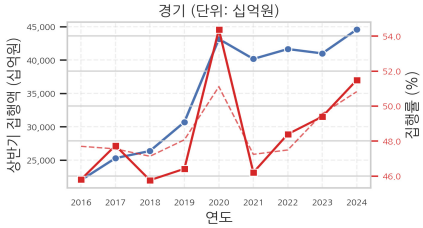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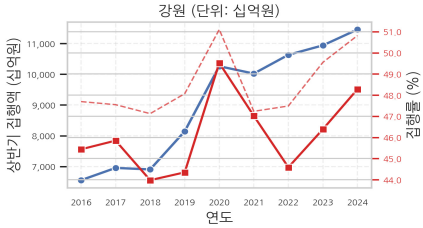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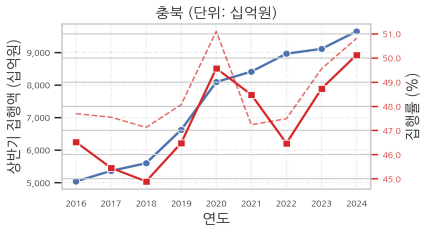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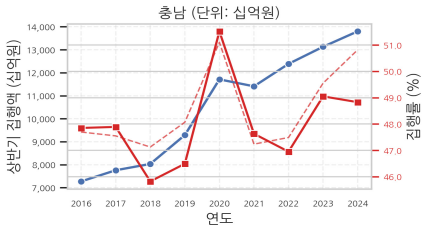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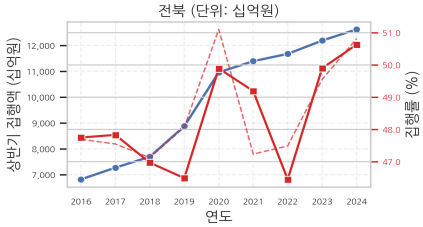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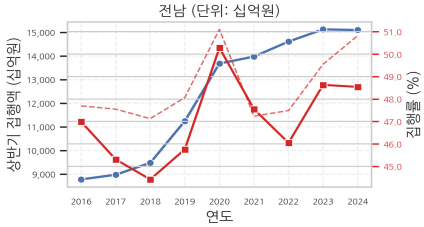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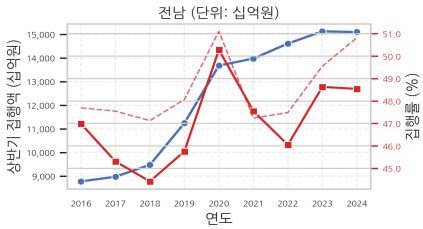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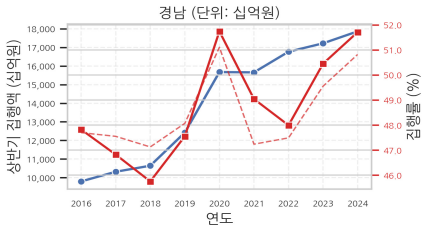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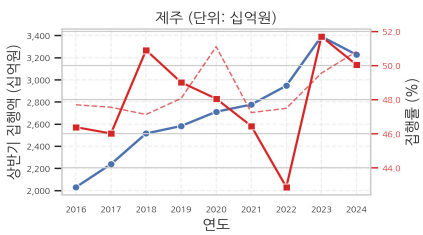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